

인권센터, 제 역할 하려면		
<div>구성원의 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장의 인권적 역량• 직제의 분리 (상담 / 조사 / 심의)</div>	<div>대학 내 협조 체계</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부처의 적극적 협조• 구성원들의 긍정적 인식과 지지</div>	<div>인권센터 간 네트워크</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간 인권센터의 네트워크, 협력 관계 형성</div>
<div>구성원의 고용안정</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의 고용 안정으로• 새로운 업무, 체계적인 교육 사업 추진</div>	<div>역할 정립 및 독립성</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센터의 위상을 강화• 형식적 기관이 되지 않도록 감독•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div>	<div>인력 확보</div> <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직교수 아닌 외부전문가• 인권 전문가 영입(조사, 심의위원회)</div>

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제시한 인권센터 역량 증진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심의 과정에 반드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담소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위원이 상주하여 인권센터의 결정에 구속력을 실어주고 있다.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성 평등 상담소와 인권 상담소를 나누어 구성하며, 성희롱·성폭력 문제 외에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성원 대변할 수 있게
독립성 보장돼야

인권센터의 독립성 보장 문제도 인권센터 설립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현재 인권센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캠퍼스 성 평등 상담실은 학생지원센터 소속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대학교를 비롯하여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인권센터를 총장·부총장 직속으로 구성하여 행정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행정학과 강제상 교수는 “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장 직속으로 조직하고, 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각 사례의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기록 문화를 명확히 하여 한번 보고되는 내용은 마음대로 지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어 “행정적인 조직 외에도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식 구성이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역시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 방법으로는 “학생회, 노조, 교수협의회가 각각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되, 균형을 지키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라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보편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 인권위가 제시한 인권센터 표준 규정안에도 학생, 직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 및 심의 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위는 위 연구를 통해 담당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연속성도 인권센터의 독립성 보장과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의 피해 사실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도 고용 환경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 역시 “학내의 동향과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기 및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무화된 인권센터 전문인력·독립성 확보 시급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지난 3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며 우리학교도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다. 인권센터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던 학내 기관들과 달리, 인권센터는 모든 분야의 인권 고충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 전담기구 부재
구성원들의 요구도 이어져

고등교육법에 제시된 인권센터의 기능은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인권 교육 및 홍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등이다. 특정 구성원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 인권 기구라는 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권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학내 기관들과의 차이점이다.

개정 법안(고등교육법 제19조)의 시행일은 2022년 3월로, 인권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데에는 약 1년여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갑작스레 대두된 문제는 아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 대학 총장에게 인권 전담 기구를 설립하도록 권고한 이후 많은 대학에서 이미 인권센터가 설립된 바 있다. 2019년 기준 89개의 대학에서 인권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학내에서도 52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공약으로 등장한 바 있다. 현 총학생회의 공약에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인권위원회 구성이 공약으로 제시되며 인권 전담 기구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2016년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한 권고를 받았고, 구성원들로부터 같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아직 우리학교 내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처는 “법안이 개정된 지 약 한 달 정

도가 지난 만큼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고, 올해 말쯤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그 구성과 조직에 대해서도 아직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기능에만 편중된 상황
시급한 개선 필요

현재 우리학교는 성 평등 상담실 내 3~4명의 직원 대부분이 교수진 혹은 상담심리사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위원이 상주하여 인권센터의 결정에 구속력을 싣고 있다.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

서는 상담소를 나누어 성 평등 문제 외에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타 대학이 대부분 성 평등 상담기구를 확장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학교 역시 적극적인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인권위가 진행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이처럼 성희롱·성폭력 상담 기구가 인권센터로 재편되면서 나타난 특정 기능의 편중 및 전문 인력의 부재를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성 평등 상담실 내 3~4명의 직원 대부분이 교수진 혹은 상담심리사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조사



우리학교엔 인권 상담소와의 구분 없이 성 평등 상담실만 운영되고 있다. (사진=한진석 기자)